

與, 조직 정비 등 정치일정 ‘올스톱’… 사태 수습에 ‘총력’

오늘 예정된 조강특위 회의 연기
지역구 행사·캠페인 등도 중지
정쟁 가능성 높아 정치활동 중단

국민의힘이 내부 조직 정비를 늦추고 있다. 3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지원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면서다.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 활동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사 예방조치 관련 현안 분석 및 대응 ▲국가 사회안전망 점검 ▲내년도 예산안에 안전 인프라 보강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회의 직후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광장에 마련한 합동분향소를 찾아 현화하고 묵념한 뒤 기자들과 만난 정 위원장은 “우리 안전망, 안전 시스템을 철저하게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예산 국회를 통해서도 점검된 내용을 가지고 보완해야 될 문제, 예산 편성 문제를 골고루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합동분향소 조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원 일동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이태원 사고 희생자 애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빙니다’라고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하고 있다. /뉴스

애도 기간 중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아깝게 희생된 154명 젊은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시간 갖기로 했다”고 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안타깝게 희생되신 154명의 넋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정부의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1일 예정한 조직강화특별 위원회(조강특위) 첫 회의는 미뤘다.

당초 조강특위는 위원장이 없는 69개 사고 당원협의회(당협)에 대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2024년 총선 대비 차원에서 당의 지역 기반 재정비 차원의 당무감사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강특위는 친윤(親尹敘열) 색채가 강한 인사로 구성된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장은 김석기 사무총장이며,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과 엄태영 조직부총장이 당연직으로 조강특위에 참여했다. 원내에서 배현진·최춘식 의원, 원외는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

원장과 합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공모 대상에 오른 당협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내정된 16곳도 있어 사실상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중) 줄 세우기’라는 비판도 있다. 이 때문에 사고 당협 정비 과정에서 내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당이 조직 정비를 늦추면서 당분간 내홍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가 조직 정비 과정에서 정쟁 발생 우려도 있어 ‘이태원 참사’ 국

가 애도 기간인 이달 5일 이후로 늦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와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당원들 여론 수렴 차원에서 비대위가 추진한 지역 순회 일정도 미뤘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는 대구·경북(10월 13일), 충남(10월 28일) 지역을 찾았다. 이달 초에는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가질 예정이었다.

한편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당이 조직 정비를 늦춰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일정도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 대회 시기와 조강특위(활동) 연기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꼭 연계된 함수 관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 한다”고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당겨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그는 지난달 31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들은 중단하거나 자제하고 있고, 각 의원들이나 지역 당원협의회 같은 경우 정치적인 캠페인은 일절 중단시켜 놓았기 때문에 조직 강화특위 같은 것도 당장 지금 중단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현화하고 있다. /뉴스

민주당, 대책기구 구성… 초당적 협력 약속

정쟁 자체하고 힘 보태기로
사고수습·지원 적극 협조
전국위원장 선거도 중단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의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기구(본부)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정부의 사고 수습 및 지원에 힘을 보탠다. 사고 당일(10월 29일)에도 국민의힘과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전방위 수사에 거친 정쟁으로 대응하던 민주당은 몸을 숙인채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게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 구성을 알렸다. 대책기구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고, 당재난재해대책위원장인 이성만 의원이 부본부장으로 조직을 이끈다.

또한 사고수습단 단장으로 남인순 의원을 임명하고 전용기·신현영 의원도

사고수습단에서 활동한다. 특히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사고 당일 현장 을 찾아 응급 구조에 나선 바 있다. 국민 추모단장은 유기홍 의원이 맡고 추모단 에 이학영, 민병덕, 한준호 의원이 포함 됐다. 진상조사단장엔 국회행정안전위 원회 간사인 김교훈 의원을 임명하고 이해식·오영환 의원과 일하도록 했다.

또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음주나 취미활동 자제령을 내리며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메시지를 내는 것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진행 중이던 전국위원장 선거를 사고수습을 위해 중단했다.

민주당은 몸을 숙이는 대신, 지난달 30일 사고 수습 브리핑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세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최고위원은 시간을 할애해 이상민 장관의 해당 발언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정부 여당과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실제로 협치가 실현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과거에 화재가 난 대구(매천) 시장 관련해 이 대표가 안전대책기구를 공동으로 만들자 제안했는데, 여당에서 예산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점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얼마전에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여야 공동 대책 기구를 제안했는데, 상당히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러나 대표께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밀한만큼 사고수습을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로부터 참사 경위와 수습대책에 대해 보고 받을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輿野, 이상민 장관 발언 질타 ‘한목소리’

李 “경찰 배치로 해결 안돼” 발언
與 “책임 회피성 발언 부적절” 지적
野 “국민화 복돋우고, 변명” 비판



비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이 놓치지 않았는가, 원인 규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최근까지 일방 통행으로 해석했던 부분을 왜 양방향으로 이렇게 통행을 허락했는지, 부분 까지 다 포함해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같은 날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지자체라는 경찰로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 장관 발언을 두고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장관 발언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조 의원과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잘 모르면 입을 닫고 있어야지 왜 자꾸 이렇게 변명하다가 국민들 회를 복돋우시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애기를 던질 때가 아니다. 경찰력 배치는 시위 진압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해 이뤄져야 하고), 경찰보다 더 권위 있는 질서유지 요원이 어디 있겠냐”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장관 발언은 아주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참사 책임과 관련 “재발 방지, 안전과 관련해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일을 어떻게 막을 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최영훈 기자